



내수경기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2008년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7%를 나타내, 2007년 4/4분기(5.7%)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GDP 구성항목별로는 전 분기에 비해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수출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내수부문의 동향과 부진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출경기 호조 속에 내수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

2008년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7%를 나타내 전 분기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에도 수출이 12.8%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관련

지표는 전 분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07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8년 1/4분기에는 3.5%로 증가세가 다소 축소되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2008년 1/4분기 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4/4분기(6.5%)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표 1〉 GDP 관련 주요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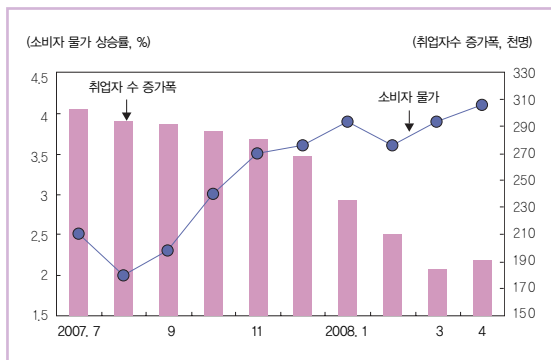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4분기
경제성장률	4.7	4.2	5.1	5.0	5.7
민간소비	-0.3	3.6	4.5	4.5	3.5
설비투자	3.8	5.7	7.8	7.6	1.7
수출	19.6	8.5	11.8	12.1	12.1
수입	13.9	7.3	11.3	11.9	9.5

자료 : 한국은행

이처럼 소비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는 고유가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1%를 나타내,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소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고용상황의 악화는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8월 이후 2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08년 3월과 4월에는 1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림 1〉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 추이(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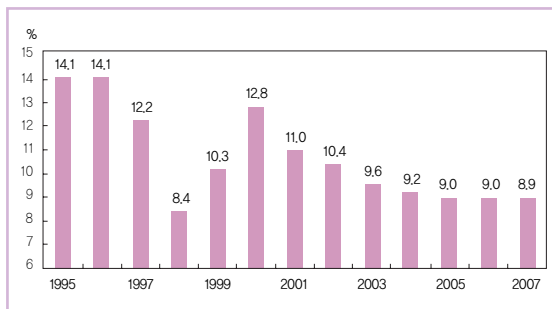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또한 내수의 한 축으로 투자상황을 반영하는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2007년 설비투자율(=명목 설비투자액/명목 GDP)은 8.9%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12.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설비투자율의 하락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열위나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 설비투자율 추이



주 : 설비투자율 = (명목 설비투자액/명목 GDP)×100
 자료 : 한국은행, ECOS DB에서 재작성

서비스업 비중은 주요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내수부문 관련이 높은 국내 서비스업은(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제외) 2007년 기준 GDP에서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에서는 74.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위상은 내수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7.2%로, OECD

국가 중 노르웨이(53.4%)에 이어 가장 저위에 있고,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69.9%), 독일(69.8%) 등에 비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대만에 비해서도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낮다.

〈표 2〉 주요국 및 경쟁국의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비중	57.2	76.0	69.9	69.8	90.7	66.9	73.4

주 : 싱가포르는 2005년 기준
 자료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및 ADB, Key Indicator 2007.

이처럼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이 선진국이나 경쟁국 등에 비해 부진한 이유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성장률, 서비스 수지의 적자 지속,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등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수지 적자의 고착화는 환율절상 외에도 국내 교육, 레저 및 관광 등 관련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구조의 안정성은 미흡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기초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함께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7년 기준 46.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1995~97년 평균(43.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여전히 고용의 질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07년 기준 63.5%에 불과하여¹⁾,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복지 수혜율 및 사회보험 가입율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06년 비정규직 통계조사 결과 분석보고, 노동 고용정책백서관실).

〈표 3〉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천명, %)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1995년	12,899	7,499	3,598	1,802	41.9
1997년	13,404	7,282	4,236	1,886	45.7
1999년	12,633	6,135	4,255	2,274	51.6
2001년	13,659	6,714	4,726	2,218	50.8
2003년	14,402	7,269	5,004	2,130	49.5
2005년	15,185	7,917	5,056	2,212	47.9
2007년	15,970	8,620	5,172	2,178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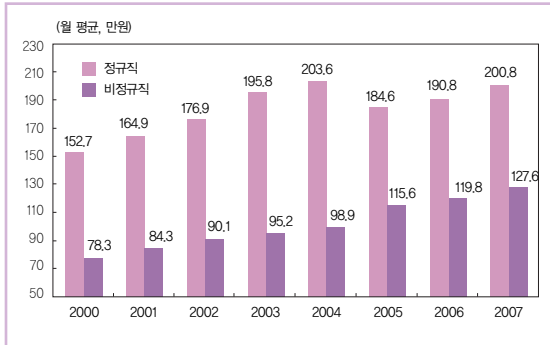
주 : 비정규직 비중 =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 전체 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내수부문의 성장 복원력 제고가 필요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잠재성장력 확충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내 수요 증가를 통해 소득 및 고용 여건을 개선시키고, 이는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은 최신 설비 도입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1) 2008년 3월에 출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60.5%로 조사되었다.

〈표 4〉 고용계층별 임금격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부가조사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부품 및 소재 산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이 주요국이나 경쟁국 등에 비해 뒤쳐진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높은 창업 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기업인의 투자 활동에 필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수 부문의 실질적인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의 질적인 개선이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 구조의 안정성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연금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외에도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 기반 조성이 과제라 할 수 있다.

FSB연구소 경제연구팀 이코노미스트 최호상(경제학박사)
economist@shinhan.com

